



[해설] 게임 과몰입은 병? 과잉진단 우려 "살편다고 음식 탓하나" 03



Economy

코스피	2203.59 (0.00)	코스닥	754.74 (0.00)
금리 (미국 3년)	1.70 (0.00)	환율 (원/달러)	1168.20 (0.00) (1일)

반쪽 1위서 '종합' 1위로... 文-JY, 비메모리 '민관공조'

팹리스·파운드리 등 5대 중심 삼성전자, 10년간 133조 투자 정부도 1조 이상 적극 지원키로

대한민국이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을 선언했다. 삼성전자가 133조원을 쏟아 부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10년여간 133조원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직접 발표했다. 팹리스와 수요기업 등 관련 업계 생태계 육성책도 포함됐다. 또 EUV(극자외선) 공정을 이용한 7나노 웨이퍼와 칩을 처음 출하하고, 선제적으로 파운드리 시장 1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후 EUV동 건설현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위 추격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공장 방문을 요청한지

3개월여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전략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중점 대책을 담았다. ▲팹리스 ▲파운드리 ▲생태계 ▲인력 ▲기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등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반도체 사업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통틀어 전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팹리스 부문 10%, 파운드리 부문 35%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라고 종착점을 제시했다. 관련 업계도 행사에 참석해 반도체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DB하이텍, 실리콘웍스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요 42개 기업 관계자와 10개 수요기업인 현대모비스, LG전자, 한전, 현대모비스 등 관

계까지 참석했다.

한편 반도체 업체들은 2분기부터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버업체들이 반도체 구매를 재개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데다, 5G 서비스 상용화에 공급 물량 조절 등으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 예측이다.

공급량 조정도 본격화됐다. 올 초 마이크론이 5% 감산을 공식화한데 이어, SK하이닉스도 신규팹 증설 등으로 일부 감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감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시스템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에 반도체 1위를 다시 빼앗겼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 같은 기간 인텔은 7% 하락에 그쳤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성장률 3.2% 美, 금리인하 압박 韓 -0.3%인데 금리인하 부정적

한미 성적표에 엇갈린 행보

한국과 미국이 1분기 성장률을 각각 -0.3%, 3.2%라는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두 나라의 금리정책 방향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국은 올해 금리를 동결하더니 금리인하 조건이 등장하며 금리인하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3%를 웃도는 경제성장에도 물가가 낮다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0%대 저물가 상황이지만 관공세를 유지하며 금리인하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상대적으로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한 한국이 현 경제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트럼프, 낮은 물가에 금리인하 압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1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시장의 시선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 쏠려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근 연준이 금리인하 조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준 관계자들이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인하 조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연



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한 것은 3%대 경제성장에도 물가지표가 제자리걸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로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 전망치인 2.5%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I)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월 이후로 14개월 만의 가장 낮은 증가 폭인데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밑도는 수준이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가격 변동이 큰 식품과 유가 등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미국 전역에서 개인이 소비한 물품의 평균 가격 인상을 조사해 작성되는데,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미 연준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로 1%포인트를 내릴 경우 지난해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인 2017년 12월 수준의 금리로 돌아가게 된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판문점 JSA 견학 재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북측 판문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교육을 일시 중단해 왔다. /뉴스1

경기부진에 은행·카드사 연체율 상승

올해 1분기 은행과 카드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KB국민·하나·우리 등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카드사의 연체율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9%에서 올해 1분기 1.96%로 0.27%포인트 증가했고, 우리카드는 지난해 말보다 0.27%포인트 상승한 1.52%를 기록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 1.4%에서 올해 1분기 1.5%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1분기 연체율은 각각 1.37%, 1.32%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07%포인트, 0.12%포인트 늘었다.

이같은 연체율 증가는 시중은행에서도 나타난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비 ▲우리은행 0.33%(+0.02%포인트) ▲신한은행 0.29%(+0.04%포인트) ▲하나은행 0.29%(+0.04%포인트) ▲KB국민은행 0.27%(+0.04%포인트) 등 순으로 올랐다.

신규 연체액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7000억원으로 연체 채권 정리규모인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연체채권 잔액은 1조2000억원 증가한 8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 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데는 국내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년만에 가장 낮은 -0.3%로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이 약해지면서 기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체율 상승이 전체 금융업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특정한 업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크다"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기업의 경영이 원활해야 상환능력도 오를 수 있는데, 국내 경제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지다 보니 차주의 상환능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